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에 칼끝 임박

검찰, 고영한·박병대 등
전직 행정처장 3인 모두 소환
내달 초 양승태 조사 전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았던 '3인방'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받게 됨에 따라 남은 수사의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본격적으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지난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관리대상사범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이 소환됨으로써 사법농단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았던 대법관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 모두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작은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이었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행정처 처장을 맡은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13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판에 참석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그 자리에서 소멸시효 문제를 두고 "왜 이런 이야기를 2012년 대법원

판결 때 안 했느냐. 브레이크를 걸어야지"라고 말하는 등 재판 개입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 전 대법관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지난 7일 비공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인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인물로 평가된다. 상고법원 추진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처장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처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차 전 대법관에 이어 지난 2014년 소인수회의에 참석해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 사법농단 의혹 중 핵심적인 혐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공개 소환된 지난

19일 첫 조사에 이어 20일과 22일 잇따라 이뤄진 비공개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는 등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처 처장 3명 중 가장 마지막으로 소환된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세 명의 전직 사법행정처 처장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미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댓글 조작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었던 민일영(63·10기) 전 대법관을 비공개 조사한 바 있다. 이인복 전 대법관과 권순일·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세 명의 전직 사법행정처 처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 실무진과 최고책임자 사이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임종현 전 사법행정처 처장, 그리고 처장들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다음 순서는 당연히 최고위직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검찰 또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진실 규명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화돼 내달 초엔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음주운전 적발' 김종천 사표 즉각 수리

(青의전비서관)

문 대통령 지시... 홍상우 선임행정관이 직무대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사표 수리를 즉각 지시했다. 김 비서관은 단속 당시 만취 수준의 운전면허 취소급 혈중 농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김 비서관은 이날 아침 출근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한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신고 및 조사 진행을 요청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종료 후 임

실장은 대통령과의 티타임에서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아울러 공백기간 동안 홍상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표 수리 지시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사표 수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비서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련해서는 "면허 취소급"이라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급에 해당한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대리기사를 부르고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용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관계자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도 음주운전"이라고 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 교육부 차관 박백범 전 교장 임명

2016년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하다 물러난 일화로 유명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교육부 차관에 박백범 세종특별자치시 성남고등학교 전 교장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같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근무한 교육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풍부한 교육 행정 경험과 현장감을 바탕으로 참여한 교육 현안에 대해 국민 기대에 맞춰 균형감 있게 추

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출신의 박 신임 차관은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해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세종시 성남고등학교 교장을 맡았다.

특히 서울부교육감이었던 2016년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다 물러난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국선언 교사 미집계 등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갈등을 빚던 와중에 경고를 받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뉴시스

대법원 "사법농단 징계청구 판사 명단, 공개한 바 없다"

국회서 명단 공개 파장 따라... 대법원장, 지난 6월 현직 판사 13명 징계 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의 명단이 국회에서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제공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언론을 통해 유출된 명단에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존에 거론됐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만걸 전 사법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13명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 실장과 심의관 등으로 근무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

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이

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피징계청구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 청구된 법관의 신상은 국회에도 제공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징계처분을 하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피징계청구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참여한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후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고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기로 했다.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는 다음달 초에 3차 심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 추진 등이 이뤄지면서 징계 심의를 위한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징계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수수 등은 5년)이 지나면 징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 기간 내 이뤄진 관여 행위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3% 전 주보다 1%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지난주 대비 1% 상승한 53%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여론을 설문한 결과, 53%가 긍정 평가했다고 23일 밝혔다. 38%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3%).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 대비 1%p 상승했으며 부정 평

가율은 2%p 감소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6%·32%, 30대 67%·23%, 40대 60%·34%, 50대 52%·43%, 60대 이상 39%·5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4%, 무당층 24%, 한국당 14%,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757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